# 민주,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총공세

### 민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전세사기 대책 맹공
### "태도 전환 촉구…피해자 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 "야당 요구, 포퓰리즘 규정, 비현실적 교조주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 지원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와도 같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전세사기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 원천자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와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개시하는 우선매수권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현실성 담보하기 어렵다"며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출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의 안이 얼마나 실효적 법안 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하루빨리 국회 대책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정부가 산정한 피해 대상범위는 요술봉과 같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입맛대로 걸러 선택적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의원은 "보증기관도 깡통전세 가능성,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 없었나 반성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 송갑석 의원 "쇄신 의총서 윤관석 이성만 자진탈당 등 요구 예상"

### 송갑석 "검찰 수사 조금 속도 더뎌…주변도 압수수색"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출두를 두고 "검찰의 정확한 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쇄신 의원총회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등 거취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 전 대표의 자진출두에 관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조금 속도가 더디고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본인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출두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송 전 대표가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도주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자진출두를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송 최고위원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정치권에 자진출두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금 빠른 수사 등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내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송 최고위원은 해당 의원들의 자진탈당 요구도 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했었던 대응,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건은 유사한 케이스를 넘어서서 훨씬 더 심한 케이스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속에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소지가 높다고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송 최고위원은 윤, 이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할 경우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시 당의 조치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법적 일의 성격도 상당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케이스로 묶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 이재명, "노동 현실 53년 전으로 퇴행"

###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간착취방지법 처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고자 분신한 건설 노동자의 명복을 빌면서 "노동 현실이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95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고용 불안정성을 활용해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간착취관리법을 조만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간담회 도중 분신한 민주노총 간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슬비 기자

# 민주 '尹 · 박광온 회동'에 "이례적 제안…상식 측면서 적절치 않아"

### 김한규 "공식 제안 오면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단 만남 가능성에 대해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한번도 회동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채 원내대표단만을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관해 논의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 내부, 지도부와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당 대표와의 회담 등은 기타 논의없이 원내대표단이 먼저 논의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그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이례적 제안이고 기존 관례, 상식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이후 대통령실의 공식 제안이 있으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